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99호
----------	--------

제출년월일 2022. 8. .
제출자 기획담당관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사항(제명, 조항, 용어 등) 불일치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합성 제고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사항(제명, 조항, 용어 등) 불일치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중앙부처

- 가) 중앙부처 : 법제처

- 나) 경 기도 : 법무담당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기획담당관 소관

제1조(「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의 개정)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7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장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제3조(「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장 행정과 소관

제4조(「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를 “시장이”로 한다.

제5조(「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개정)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을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7조(「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개정)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9조(「김포시 포상조례」의 개정)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을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의 개정)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13조(「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제4항”을 “제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4장 회계과 소관

제14조(「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른다.

제5장 문화예술과 소관

제15조(「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로 한다.

제6장 복지와 소관

제16조(「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장 여성가족과 소관

제18조(「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2조의 2항”을 “제21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8장 환경과 소관

제19조(「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 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20조(「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의 개정)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로 한다.

제9조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로 한다.

제21조(「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9장 기후에너지와 소관

제22조(「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2항”으로 한다.

제23조(「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33조”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으로, “별표8”을 “별표 9”로, “생활소음”을 “생활소음·진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33조”를 “규칙 제21조에 따른”으로, “별표8”을 “별표 9”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으로 한다.

제10장 환경지도과 소관

제24조(「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9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11장 자원순환과 소관

제25조(「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장 교통과 소관

제26조(「김포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장 안전총괄과 소관

제27조(「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8조(「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29조(「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있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14장 철도과 소관

제30조(「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장 도시계획과 소관

제31조(「김포시 경관 조례」의 개정)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김포시도시개발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개발법 및 도시계획법”을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장 도시관리과 소관

제33조(「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기본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제34조(「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로 한다.

제17장 보건행정과 소관

제35조(「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 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36조(「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장 축수산과 소관

제37조(「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19장 농업진흥과 소관

제38조(「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바목”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39조(「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같은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장 수도과 소관

제40조(「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김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김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장 하수과 소관

제42조(「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규칙 제23조의 규정”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22장 도로관리과 소관

제43조(「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기획담당관 황 규 만
	팀장 직위·성명	법무통계팀장 강 신 준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양 성 지(☎2296)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예산”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포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 제142조-- ----- -----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		

<p>② (생략)</p> <p>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법 제42조제1항</u>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후관리) ----- ----- ----- ----- ---- <u>법 제51조제1항</u>----- -----.</p> <p>1. ~ 4. (현행과 같음)</p>
--	--

제2조(「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 ----- ----- ---. ----- ----- ----- -----.</p> <p>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3조(「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이 ----- ----- ----- ----- ----- ----- -----.

제5조(「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유사 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설	제6조(유사 위원회의 활용 등) ① ---- -----

<p>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u>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p> <p>----- <u>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6조(「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제7조(「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 (수여자의 권리 등) 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 ② (생략)	제8조 (수여자의 권리 등) ① ----- ----- <u>「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u>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제1조(목적) ----- -----

한민족 평화와 번영을 위한 김포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제9조(「김포시 포상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 (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 (포상절차) ① ----- ----- ----- --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6조제2항에 따라 ----- -----

회사무국장 및 소속기관·하부행정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 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 ----- ----- ----- -----.
--	--

제11조(「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

제12조(「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 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 법」 제125조 ----- ----- ----- ----- ----- -----.

제13조(「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 ----- ----- ----- -----.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의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11조(설치) ①----- ----- 제126조----- ----- -----.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	제19조(설치) ① 법 제127조----- ----- -----.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생략)	제23조(설치) ① ----- ----- 제7조제1항·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u>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u>	<u>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른다.</u>
---	---

제15조(「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국제조각공원(이하 “조각공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 ----- ----- ----- -----.

제16조(「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제17조(「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	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p>레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p> <p>1. ~ 12. (생 략)</p>	<p>-----</p> <p>-----</p> <p>-----</p> <p>-----</p> <p>-----.</p> <p>1. ~ 12. (현행과 같음)</p>
---	--

제18조(「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7조(위탁자 신청 및 선정) ①·② (생 략)</p> <p>③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항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8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 8. (생 략)</p>	<p>제7조(위탁자 신청 및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제21조</p> <p>-----.</p> <p>제8조(위탁계약) ①-----</p> <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p> <p>-----.</p> <p>1. ~ 8. (현행과 같음)</p>

제19조(「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0조(교육훈련) ① (생 략)</p> <p>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p>	<p>제10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p>
--	---

제20조(「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② (생략)</p> <p>③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에 따른다.</p> <p>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에 따른다.</p>	<p>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p> <p>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p>

제21조(「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② (생략)</p> <p>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p>	<p>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u>같은법 시행령 제44조</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p> <p>----- <u>같은 법 시행령 제35조</u>-----</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	---

제22조(「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저공해 조치 이행 자동차의 표지부착)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u>법 제58조제9항</u> 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저공해 조치 이행 자동차의 표지부착) ----- ----- <u>법 제58조제12항</u> ----- --.

제23조(「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소음·진동 규제법</u> 」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소음·진동관리법</u> 」----- ----- ----- ----- -----.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u>규칙 제33조</u>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u>별표8</u> 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u>생활소</u>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 「 <u>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u> 」(이하 “ <u>규칙</u>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 <u>별표 9</u> -----

<p>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u>규칙 제33조</u>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u>별표8</u>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u>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u>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 <u>생활소음·진동의</u> ----- ----- -----.</p> <p>②---- <u>규칙 제21조에 따른</u> ----- ----- -- <u>별표 9</u>----- - <u>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u>----- ----- -----.</p>
---	---

제24조(「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법 제42조제1항</u>에 따라 사고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 <p>3.·4. (생략)</p> <p>제20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p>	<p>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23조의3제1항</u>-----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20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 -----</p>

<p>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u>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u>」 제19조의4 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u>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u>」 제19조의4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p>	<p>----- ----- ----- 「<u>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u>」 제19조의4 제5항-----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u>」 제19조의4제5항----- ----- -----.</p>
---	--

제25조(「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5조(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 ① 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재활용</p>	<p>제5조(자원화센터의 관리·운영) ① - ----- -----. ----- ----- ----- ----- ----- ----- -----</p>

<p>센터를 일괄 또는 각각 분리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시장이 인정하는 자</p> <p>② ~ ⑤ (생략)</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제6조에 따라 -----</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제26조(「김포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7조 (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내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1.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7조 (주차장의 표시) ①-----</p> <p>-----</p> <p><u>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u> ---</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27조(「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8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p>	<p>제38조(대책본부 문서관리) -----</p> <p>-----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p>

<p><u>규칙」</u>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p>	<p><u>칙」</u>----- -----.</p>
--	----------------------------------

책] _____
_____.

제28조(「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 ----- 같은 법 제19조 ----- ----- ----- ----- ----- -----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9조(「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	제1조(목적) ----- ----- ----- -----

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
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
해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김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관련분
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
한다.

3. (생 략)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②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
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
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
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김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관련분
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
한다.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u>지진재해대책법</u>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임을 증명함.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u>지진·화산재해대책법</u>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임을 증명함.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김포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Tel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 × 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김포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Tel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 × 90mm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 × 297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 × 297mm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 × 297mm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 × 297mm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 × 297mm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 × 297mm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제30조(「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및 운용)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 ----- ----- -----.

제31조(「김포시 경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p><u>영 제23조제5항</u>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②·③ (생략)</p>	<p><u>영 제23조제6항</u>-----</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32조(「김포시 도시개발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u>도시개발법</u> 및 <u>도시계획법</u>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2조 (정의) 「 <u>도시개발법</u> 」 및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제4조 (공청회 개최) ① <u>법 제7조제1항</u> 및 <u>영 제10조제3항</u>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공청회 개최) ① ----- - <u>영 제13조제5항</u> 에 따라 ----- ----- ----- ----- ----- -----.
②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u>영 제10조제1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② ----- ----- <u>영 제13조제2항</u> 에 따라 ----- ----- ----- ----- -----.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33조(「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 ④ (생략) ⑤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 직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

제34조(「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특별회계의 용자조건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 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 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용자조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 령」 제78조 ----- -----.

제35조(「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 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국	제6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 ----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

<p>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p> <p>② · ③ (생 략)</p>	<p>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제36조(「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3. (생 략)</p>	<p>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p> <p>-----.</p> <p>제2조(정의) -----</p> <p>-----.</p> <p>1. -----</p> <p>-----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p> <p>-----.</p> <p>2. · 3. (현행과 같음)</p>

제37조(「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 ② (생 략)</p>	<p>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p>	<p>③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 ----- ----- -----</p>
--	---

제38조(「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농업을 주제로 학습·생태체험과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 ----- -----.</p>

제39조(「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제2조 (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2.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u>같은 법 제4조 제5항</u> 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2. ----- ----- ----- <u>같은 법 제7조 제4항</u> ----- --.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제40조(「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등)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 ----- ----- ----- -----.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김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제2조 (용어의 정의) -----

<p>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p> <p>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u>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u>을 말한다.</p> <p>3. ~ 5. (생략)</p>	<p>-----.</p> <p>1. ----- --- 제3조제5호에 따른 ----- -----.</p> <p>2. -----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 -----.</p> <p>3. ~ 5. (현행과 같음)</p>
--	--

제42조(「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제15조----- ----- ----- ----- -----.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u>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u>	2.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
행하지 아니할 때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
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
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
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
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
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
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
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 ---
-- 「건축법」 제22조제1항 -----

-----.

②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
27조제9항-----

<p>한다</p> <p>1. · 2. (생 략)</p> <p>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생 략)</p> <p>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p> <p>-----</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	---

제43조(「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이의신청) ①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이의신청) ① -----</p> <p>-----</p> <p>-----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p> <p>-----</p> <p>-----.</p>

지방자치법

(제1조, 제2조, 제5조~제8조, 제10조~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관련)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 제14조, 제34조 관련)

[시행 2022. 4. 1.] [행정안전부훈령 제237호, 2022.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8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금고 -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등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정부 표창 규정(제9조 관련)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조(추천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제17조 관련)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관련)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

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19조 관련)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781호, 2016. 1. 19., 타법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20조 관련)

[시행 2020. 2. 19.] [환경부고시 제2020-40호, 2020. 2. 19., 일부개정.]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 관련)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27호, 2022. 1. 6., 일부개정]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22조 관련)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2019. 4. 2.>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19. 4. 2., 2021. 4. 13.>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9. 4. 2., 2020. 5. 26., 2021. 4. 13.>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6. 1. 27.,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2020. 12. 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

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3. 4. 5., 2016. 12. 27.>

⑪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4. 2., 2020. 5. 26.>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2020. 5. 26.>

⑭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⑮ 제14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1. 28., 2019. 4. 2.>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⑯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 관련)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관련)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⑥ 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⑦ 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관련)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관련)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5조 관련)

[시행 2021. 07. 02.] (전부개정) 2021. 07. 02. 조례 제1835호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란 김포도시관리공사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6조 관련)

[시행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8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6. 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6. 1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7조 관련)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9조 관련)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제29조 관련)

[시행 2021.01.04.]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770호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통제관은 자연재난에 대하여는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사회재난에 대하여는 해당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9.3., 2020.12.31.>

5.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관리·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의 재난관리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9조 관련)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2020. 5. 26.>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 3.

22., 2014. 1. 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경관법 시행령(제31조 관련)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2. 28.>
-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2. 2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관련)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2조 관련)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5호, 2022. 6. 21., 일부개정]

- 제13조(공청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

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제33조 관련)

[시행 2020.09.29.] (제정) 2020.09.29 조례 제173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35조 관련)

[시행 2020. 9. 7.] [총리령 제1641호, 2020. 9. 7., 타법개정]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검사

혈액관리법 시행령(제36조 관련)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5호, 2021. 6. 15., 일부개정]

-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 [제2조에서 이동]

혈액관리법(제36조 관련)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 관련)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

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⑧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 관련)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
 -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수도법(제40조, 제41조 관련)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9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 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16. 삭제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제28조, 제42조 관련)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垓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

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6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 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하수도법(제42조 관련)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물환경보전법(제42조 관련)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